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3..77.225

〈일반논문〉

식민지 조선의 법대·의대 진학 열풍
: 경성제국대학 조선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김 슬 기 *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족·지역 차별과 학력주의의 대두
Ⅲ. 식민지 관료제와 법대 선호 현상
Ⅳ. 대졸자 취직난과 의대 지원자 증가
Ⅴ.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학력에 기반한 지위 상승 노력이 법대·의대 진학 열풍으로 나타난 배경과 그 결과를 살폈다. 일제 하 민족차별과 구한말에서부터 이어진 지역차별 속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지위 상승을 위해 법조인, 총독부 관료, 의사, 기자, 은행원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법대와 의대에 진학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고등교육 정책은 식민통치에 유용한 학문만을 허용했기 때문에 경성제대에서는 식민지 관료 양성에 필요한 법문학부의 법학과와 위생 및 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학부가 중시되었다. 법학과 수업과정은 고등문관시험 과목과 연동되었고, 의학과는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기회가 제공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경성제대 법과 졸업생들의 상당수는 총독부 관료로 임용되었다. 의학부 졸업생들도 경성제대부속 병원에서 일하거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강사 또는 교수가 되었으며, 개업의가 되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문직업을 가지게 된 이들은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 다수는 기호인들에게 차별받던 서북 출신이었다. 학력과 전문직업을 가짐으로써 민족차별에 더해 지역차별을 이겨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법대·의대 열풍은 결과적으로 식민지에 존재하는 차별들을 타파하기보다, 식민당국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지위 상승 노력이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 주제어
학력주의, 경성제국대학, 의대, 법대, 일제 식민지 고등교육, 식민지 근대

I. 머리말

1894년 갑오개혁의 결과 조선에서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1] 같은 해 군국기무처는 과거제 폐지를 발표하고, 새로운 관리 선발 규

1) 갑오개혁기 신분제 폐지와 관련한 군국기무처 의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문벌, 양반과 평민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에 따르며 별도로 서로 만났을 때의 의례를 정한다. 1.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1.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군국기무처에 글을 올릴 수 있고, 그것을 회의에 부친다.” 「의안」, 1894.06.28., 군국기무처 편, 『경장의정존안』, 1894.

정인 '선거조례'와 '전고국조례'를 발표했다. 이는 개화정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지역과 신분에 관계없이 선발하기 위함이었다. 조선 정부는 교사, 외교관, 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함교, 외국어학교 등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2] 이를 기점으로 조선은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 갔다. 한 개인의 지위는 신분이 아닌, 직업과 같이 능력을 통해 얻는 요소로 결정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학력이 능력의 척도로 대두되었으며, 학력에 기반하여 획득한 직업이 개인의 지위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다.[3]

그러나 능력에 기반한 지위상승 시도는 이중의 장벽에 부딪히곤 했다. 바로 신분제 잔재와 일제 식민지배였다. 신분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관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았다. 지역차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 후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지역 차별은 서북인, 즉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들에 대한 기호인의 차별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시대 서북지역이 삼남 등 남부지역에 비해 성리학과 사족(士族) 중심의 문화 및 향촌질서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서북 출신들의 관직 진출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신분제적 차별이었다.[4] 여기에 더해 일제 식민지배는 진학과 취업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법적·구조적·관행적 민족차별을 가했다.[5] 식민지 조선에서는 학력을 얻어 차별을 상쇄하고, 지위상

2) 김태웅, 장세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43-44쪽.

3) 학력은 '학교를 다닌 경력'이라는 의미의 학력(學歷)과 교육을 통해 얻은 능력을 뜻하는 학력(學力)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학력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어느 학교의 어느 학과를 졸업했는가 라는 의미에서 學歷, 그리고 어떠한 전문 지식을 쌓았느냐는 면에서 學力 두 가지 모두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4) "표면으로 관찰하여보면 서북 대 기호의 지방적 감정인듯하나 그 이면에 있어서는 평민 대 귀족의 항쟁이라고 할 것이다." 〈폐습누관부터 개혁하자 (7)〉, 《동아일보》, 1926.09.17; 오수창, 「조선시대 평안도 출신 문신에 대한 차별과 통청」, 『한국문화연구』 15, 2008, 45쪽.

5)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2021.

승을 도모하려는 조선인 청년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갔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학력에 기반한 개인의 지위 상승 노력이 어떠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 유일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의 전공 선택 양상을 밝힌다.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였는지는 졸업 이후 직업 선택과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선인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더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직업과 직결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 명문대학 졸업이라는 학벌만으로 돌파할 수 없는 민족별 출신 지역별 격차를, 전문직업을 가짐으로써 해소하고자 한 개인의 노력을 드러내고자 한다.

일제 하에서 대학 진학에 기반한 지위 상승 노력을 조명한 기존 연구는 두 갈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바로 조선인 해외유학생 연구와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국대학교 조선인 학생에 대한 연구이다. 1924년 식민지 조선 최초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 조선에 대학이 없었으므로, 1924년 이전에 대졸 학력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해외유학생 출신이었다. 먼저, 해외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일본 지역 유학생의 출신 배경 및 졸업 이후 활동을 살핀 저작이 다수를 이룬다. 미국 유학생의 경우 신분제 사회에서 차별받던 서북인들이 기독교와 서구식 교육을 수용하고, 미국 유학을 통해 근대 엘리트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가 이뤄졌다.[6] 일본인 유학생들에 주목한 연구는 식민제국 본토에 위치한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엘리트 청년들이 식민지 관료였거나 판검사, 혹은 교수나 사업가였던 경험을 밑천으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엘리트로 자리매김했음을 해명했다.[7]

---

6) 장규식, 「일제하 미국 유학생의 근대지식 수용과 국민국가 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34, 2005; 김상태,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황경문 저, 백광열 역, 『출생을 넘어서-한국 사회 특권층의 뿌리를 찾아서』, 너머북스, 2022.

다음으로 경성제국대학교 조선인 학생에 주목한 연구 또한 이들의 출신 배경과 사회진출을 다룬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1938년 당시 재학생 생활조사기록을 분석하여 조선인 학생 다수가 중인층 출신으로, 경성제대 입학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도모했음을 밝힌 연구가 주목된다.[8] 이 연구는 학생 부형의 직업이 서기, 하급 관공리, 의료 등 전통적인 중인층 직업이 많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선시대 말기 농업의 상업화와 직업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비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일부 농민층과 향리 등의 중인층에게 경성제대가 사회적 상승 이동의 통로로 기능했음을 해명했다. 또한 경성제대에 입학하려는 조선인 학생들이 법문학부에서 법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법학과 졸업 이후 총독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여 일제 통치집단의 주변 엘리트로 포섭되고, 해방 이후 정부에서도 등용되었음을 논증한 연구가 다수 생산되었다.[9]

살펴본 연구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졸업 이후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식민지 및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소상히 해명했다. 그러나 일제 지배정책뿐만 아니라, 구한말부터 이어진 신분제적 잔재가 얽혀 있는 식민지 조선

7)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 휴머니스트, 2019.

8) 차남희, 이진,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시기 중인층의 상승 이동」, 『담론 201』 40, 2010, 9쪽.

9) 정선이,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양상과 특성」, 『교육비평』 23, 2007; 정선이,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77, 2008; 장세윤,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졸업생과 고등문관 시험」, 『서울과 역사』 69, 2007; 전병무, 「일제하 고등문관시험 출신 조선인 판검사의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학논총』 34, 2010; 장신, 「일제하 조선인 고등관료의 형성과 정체성-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 2007;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이충우, 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사회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보인 근대 학술에 대한 관심과 지위 상승 욕망이 어떻게 결부되었는지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에 불어닥친 법대, 의대 진학 열풍의 배경과 그 함의를 해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1924년 조선 최초의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해방 전까지 이곳에 입학한 조선인 학생들은 1,000여 명에 달했으며, 법문학부 18회, 의학부 17회, 이공학부 3회에 걸쳐 810여 명의 한국인 졸업생이 배출되었다.[10] 이들은 식민지 조선의 최고 엘리트로 선망받았다. 그러나 그 내부에도 전공을 둘러싼 비공식적 위계관계가 존재했다. 조선총독부는 효과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관료를 양성하는 법문학부 법학과와 위생·보건 정책을 뒷받침하는 의학부를 중시했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논리는 경성제대 내외부에 비공식적인 학문 및 학과 간 위계질서를 생산했다. 경성제대의 조선인 지원자들은 그 위계의 상위에 있는 법학과와 의학과에 진학하길 희망했다.

이 글에서는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난 의대와 법대 진학 열풍을 조명한다. 조선인 청년들이 민족차별과 지역차별이라는 조건 속에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과 의사와 법조인, 총독부 관료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직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력이 대두하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10) 이충우, 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40쪽.

Ⅱ. 민족·지역 차별과 학력주의의 대두

학력은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된 후 관공리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학력은 제도로 체계화되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선발과 배치의 지표가 되었다.[11]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제국에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비롯하여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법학교와 관립한성사범학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등을 폐지하였으며,[12] 점진적 동화주의를 실현하고자 '시세(時勢)와 민도(民度)'를 내세워 초등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차별적 교육을 실시하였다.[13]

조선총독부는 대학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915년 3월에서야 뒤늦게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하여 법률, 경제, 의술, 공업, 농림에 대한 전문교육 수준의 고등교육을 도입했다.[14] 이에 대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은 1911년의 「조선교육령」으로 전문학교에 대한 방침을 정하였으나, "그 세칙은 보통교육의 발달을 기다려"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15] 이는 고등교육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데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관립으로 경성전수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4개교가 설치되었으며, 1917년 연

11)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2021, 21쪽.
12) 「칙령257호 법학교, 성균관, 관립한성사범학교 및 관립한성외국어학교를 폐지한다. 부칙 본령은 명치4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총독부 관보』, 1911.10.16.
13) 김태웅, 장세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112쪽.
14) 「조선총독부령 제26호 전문학교규칙」, 『조선총독부 관보』, 1915.03.24.
15) 「조선총독부훈령 제16호」, 『조선총독부 관보』, 1915.03.24.

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1922년 보성전문학교가 사립 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 연희전문학교는 문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응용화학과, 신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두고 대학 승격을 노렸으나 조선총독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학문 탐구에 기초한 대학 교육의 원천적 차단과 전문기술 전수에 초점을 맞춘 전문교육의 제한적 시행에 머물렀다. 이는 식민 본국과 구분되는 식민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었다.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인 학생들이 법학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하려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식민본국과 식민지의 고등교육에 대한 차별에 더해, 조선총독부는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학제에 차등을 두었다. 조선인은 보통학교(4년제)-고등보통학교(4년제)에, 일본인은 소학교(6년제)-중학교(5년제)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제 차별은 졸업 이후 취직 기회의 민족 간 격차로도 이어졌다. 중학교 졸업자는 하급 관료에 해당하는 판임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은 중등학교 졸업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인 중학교 졸업자와 달리 문관보통시험에 응시해야만 했다.[16] 적용되는 학제가 다른 제도적 민족 차별, 그리고 학력과 취직 자격을 연동한 규정은 조선인 학생들의 지위 상승 노력에 제약을 가했다.

1919년 3.1운동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에 부딪히자, 조선총독부는 격화된 조선인의 반일 감정을 무마시키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문화통치'의 내선융화 정책 기조하에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대는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이

16) 정병욱, 『낯선 삼일운동 - 많은 인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비평』, 2022, 267쪽;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8, 2022, 50-51쪽.

모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중등–고등교육 체계가 정립되었다. 경성제대 졸업생에게는 법학과의 경우 고등문관시험 예비시험 면제, 문학·사학·철학과 출신은 중등학교 교원 자격이, 의학부는 의사자격증이 주어졌다. 학력이 진학과 취직의 자격이 될 수 있는 학제가 구비되고, 기업이 학력을 인사제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면서 학력주의는 '제도화' 되었던 것이다.[17] 이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의 학력을 갖고자 경성제대에 지원하는 조선인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경성제대가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을 모두 수용하고, 앞서 언급한 취직 자격을 민족별 차등 없이 주었다고 해서 이 학교에서 제도적 민족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학제 상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과 달리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 내에 예과 2년 과정을 두어 고등학교 학력을 대체 했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예과 학생 모집이 시행되었다. 입학정원은 문과 80명, 이과 80명 총합 160명이었다. 입학 자격은 1)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2)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 3) 조선 총독이 일반 전문학교 입학에 관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지정한 자였다. 시험과목은 문과의 경우 일본어 및 한문, 영어, 수학, 동양사, 외국지리였고, 이과는 일본어 및 한문, 영어, 수학, 화학이었다.[18] 경성제대 입학시험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일본인에게 유리했다. 또한 입학은 시험 성적에 더해 민족별 인원 할당제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했다. 규정으로 정해진 민족별 인원 할당은 없었다. 그러나 조선인 지

17) 정병욱, 「보론 3 : 삼일운동과 학력주의의 제도화」, 『낯선 삼일운동–많은 인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비평사, 2022, 287쪽.

18) 〈금년도 각학교 입학소개〉, 《조선일보》, 1926.02.01.

원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합격자가 더 많았으며, 입학 이후 성적순으로 교실 앞에서부터 자리를 배정할 때 조선인 학생들이 앞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인 학생에 대한 우대 방침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19)]

경성제대는 「제국대학령」에 입각하여 설립되어, "국가에 수요(須要)한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하고 아울러 그 온오(蘊奧)를 공구(攻究)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의 통치에 필요한 학문만을 연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은 「경성제국대학관제」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다. 관제 제2조는 "총장은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일반의 일을 맡고 소속 직원을 통할하여 감독함"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20)] 식민지 조선의 학력 위계 정점에 위치한 학교인 경성제대가 이와 같은 방침 아래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지 않고 조선 내에서 대학에 가려는 조선인 학생들은 식민당국이 허용한 학문만을 수학할 수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초기에는 법문학부와 의학부 두 학부만이 설립되었다. 이공학부는 전시체제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1941년이 되어서야 추가적으로 설립되었다. 법문학부에는 법학과, 사학과, 문학과, 철학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학부는 의학 단일 학문 내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식민지에 설립된 경성제대는 본토의 제국대학과 달리 정치학과, 경제학과 등이 설립되어있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에 필요한 관료 충원을 위해 법학과를, 동양학 연구를 위해 사학·문학·철학과를 설립하게 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정치·경제에 대한 의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문인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

19) 이충우, 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20) 〈경성제국대학 관제〉, 《조선일보》, 1924.05.03.

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명백한 교육 기회의 차별을 둔 것이었다.

일제의 차별적인 고등교육 제도에 더해 조선인 사회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지역차별 또한 조선인 학생들의 진학과 취직 기회에 격차를 생산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이래 식민지 조선에서는 점차 양반 및 상민 출신에 대한 반상(班常)의 구별이 사라져갔다. 일제하에 도입된 민적(民籍)에는 출신 신분을 기입하지 않게 되어있었고, 대신 본관(本貫)을 기재하도록 했다. 1930년대 말까지 학교 입학원서와 취직을 위한 이력서 또는 지원서 등에 반상(班常)을 기입하도록 하기는 했으나, 제도화된 학교 입학이나 취직에서 출신 신분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호 지역의 조선인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존민비(官尊民卑) 관념이 남아있어 서북 출신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었다.[21]

신분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기호-서북 출신들의 지역감정은 당대인들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해인 1924년에 《조선일보》는 「분열과 통일 우리 이상과 소위 지방열」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소위 지방열이니 무엇이니 하며 서북이니 기호이니 구별을 부쳐가지고 매양 편협한 사상을 서로 가지라하며 무슨 집회나 단체가 생기면 먼저 분파와 이론을 각기 세워가지고 서로 세력을 다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22] 라고 말하며 기호-서북 간의 지역감정을 비판하고 "옳은 조선인으로 큰 세계인으로 살기 위해" 이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서북-기호 간의 갈등은 명문대 출신 서북인의 사회 활동에 제한을 가하기도 했다. 기호 지역 유력자인 윤치호(尹致昊)의 일기에는 그러한 정황이 상세히 드러난다. 윤치호의 기록에 따르면, 이화여전의 미국인 교장이

21) 〈봉건시대의 유물인 "족칭" 관념을 철폐〉, 《동아일보》, 1938.06.18.
22) 〈분열과 통일 우리 이상과 소위 지방열 (하)〉, 『《조선일보》』, 1924.06.20.

이광수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자 했는데, 예정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지 않은 때 유억겸이 교장에게 이광수의 강연을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충고했다.[23] 이광수는 서북 출신으로, 서북인들이 조직한 수양동우회에 속했다. 유억겸의 경우 기호인들이 조직한 흥업구락부의 일원이었다. 신분제에 기반한 당대 기호인과 서북인의 지역감정은 당대 조선인 사회의 정치적 움직임을 양분하고 있었다.[24] 기호인의 세력이 강했던 경성에서, 기호인들은 서북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이광수는 와세다대학교 재학 중에 2.8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임정에 참여하였다가 조선에 귀국하여 1926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한 유력자였다. 그의 학력과 활동을 볼 때, 식민지 조선에서 그의 위상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로 명망 높았던 이광수마저도 서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호인들에게 활동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당대 조선인 학생들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학력 자체만으로는 관습적 장벽을 넘기 어려웠음을 말해준다.

조선인 학생들은 학벌에 더해 사회적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당대 인정받는 전문직은 총독부 관료, 법조인, 의사 등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법학과와 의학과 진학 열풍이 불었다. 경성제대 법학과와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제대 의학과와 경성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전문학교 등이 각광을 받았다.[25] 그중에서도 경성제대는 학력 위계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학력을 얻

23)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1931년 4월 19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4) 김상태, 「1920년-30년대 동우회·흥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28, 1992.
25) 공업화 이전 1910-20년대에는 조선인 학생들의 공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 같다. 경성공업전문학교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보결모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921년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장이 조선총독에게 보낸 문건인 「생도 보결모집건」에 따르면 염직과, 응용화학과, 요업과, 광산과 등에 조선인 28명, 일본인 4명이 결원이었고, 부속 공업전습소의 직물과, 화학제품과, 도기과 등

을 수 있는 동시에, 전문직을 가지는데 필요한 자격조건과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경성제대는 설립 첫해부터 전시체제기 때까지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1924년 2월 20일에 마감된 응시자 모집 결과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쳐 658명에 달했다. 경쟁률은 4.6대 1이었다. 그러나 날로 갈수록 조선에서 하나뿐인 대학에 진학하려는 조선인 청년들의 열망은 커져갔다. 모집 인원은 160명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지원자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지원자는 1924년 658명으로 시작하여, 1926년 887명, 1928년 994명, 1930년에 이르면 1,102명에 이른다.[26] 첫 두 해 모집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경쟁률은 6대 1 정도가 되었다.

Ⅲ. 식민지 관료제와 법대 선호 현상

식민지 조선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법학과에 진학하고자 했다. 이는 경성제대뿐만 아니라,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에 진학한 조선인 유학생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 전후인 1920년대 도쿄제대와 교토제대에 유학한 조선인 학생들도 상당수

에 조선인 38명이 결원이었다. 「생도보결모집 건」, 1921.04.11.,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실업관계』, 1921,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관리번호 CJA0004682-0027155331)

26) 한국인 지원자를 따로 산출한 자료는 1924년 지원자가 241명, 1926년 374명이었다고 한다. 이후 자료는 한국인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 밝히지 않고 이으나, 이전과 유사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 1924.02.22; 1926.02.18; 1928.03.30; 1930.02.23; 차남희, 이진,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시기 중인층의 상승 이동」, 『담론 201』 40, 2010, 14쪽.

가 법학과에 진학했다.[27] 가히 '법대 열풍'이라 할만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법학과 졸업이라는 학력이 식민지 관료제와 연동되어 관료로 진출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전통적으로 조선인들이 문인 관료가 되는 것을 선호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제국대학 법학과 졸업생은 고등문관시험 예비시험이 면제되고 보통문관 자격이 부여되었으므로 총독부 관료가 되는데 이점이 있었다.[28] 이는 조선인 청년들에게 일본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짐으로써 민족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대학 법학과인 경성제대 법학과에 대한 조선인 학생들의 입학 경쟁이 치열했다.

경성제국대학은 예과와 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과는 문과A조, 문과B조, 이과로 운영되었는데, 예과를 수료하면 문과A조는 법문학부 법학과로, 문과B조는 법문학부 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중의 한 학과로 진학하게 되어 있었다. 이과는 1941년 이공학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의학부 단일 과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1941년 이전의 예과 이과 수료자는 모두 의학부로 진학하였다. 당시 문과를 지망하는 조선 학생들은 상당수가 A조를 1지망, B조를 2지망으로 했다. 학부의 법학과로 자동진학하는 문과A조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성제대 법과는 관료 진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27) 일본 유학생들은 주로 법학부, 경제학부, 문학부 등 문과계열 유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이공계 진학자는 소수였다. 1920년 전체 일본유학생들의 전공 상황은 법학·경제·사회과 68%, 상과 6.8%, 문과 8.6%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30년은 법학 30.7%, 경제학 13.3%, 상학 9.9%, 문학 19.9%로 전체의 74%가 법경계열 졸업생이었다.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 휴머니스트, 2019.

28) 장세윤,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졸업생과 고등문관 시험」, 『서울과 역사』 69, 2007, 50쪽.

이점을 가지고 있었을까. 먼저, 총독부 고급 관료선발시험인 고등문관시험 본시험 준비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본시험은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과목은 필수와 선택이 있었다. 행정과는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이, 외교과는 헌법, 국제공법, 경제학, 외국어, 사법과는 헌법 민법 상법 형법이 필수였다. 경성제대 학부 강좌의 종류는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정해졌다. 1926년 3월에 제정된 칙령에 따르면 법문학부에는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경제학, 정치학 등의 강좌가 개설되었다.[29] 법학부의 강좌개설 내용 대부분은 고등문관시험의 필수과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실상 학교 내에서 시행되는 강의와 과제, 졸업시험 준비가 곧 고등문관시험 본시험 준비였다. 학부 강좌와 고등문관시험 과목의 연동 덕분에 많은 조선인 졸업생들이 시험에 합격하여 총독부 고등관료가 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일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1942년까지의 법학과 조선인 졸업생은 239명이다. 이중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총 54명으로, 약 22%에 해당한다.[30]

예과 문과A조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았으나, 학교 당국은 일본인 학생을 비공식적으로 우대하였기 때문에 문과 A조의 조선인 학생 수를 제한했다. 문과 A조의 조선인 학생 수는 늘 정원 80명 중 10명 안팎으로 소수였다. 1924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이 존재하는 전 시기 전공별 조선인 예과 입학자를 볼 때, 문과B조가 가장 많았다. 학교 당국이 전문직과 직결되는 예과 문과A조와 의학부는 일본인 학생을 더 많이 선발했기 때문이다. 반면 당시 교직을 제외하면 별다른 직업 자리가 없었던 문과B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선인 학생을 많이 선발하였다. 법학과 진학을 위해 예과

29) 「조선총독부칙령 제47호 경성제국대학 각 학부의 강좌의 종류 및 그 수에 관한 건」, 1926.03.31.

30) 정선이,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77, 2008, 16쪽.

문과B조로 입학한 학생이 재수하여 다음 해 예과 문과 A조로 입학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처음부터 문학과 진학을 위해 문과 B조를 택한 사람도 있지만, 문과 A조에서 밀려나 B조로 진학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925년 예과2회 모집에서 문과 B조로 입학했으나, 다음에 예과 3회 모집에 응시하여 문과 A조에 재입학한 사경욱이 그 첫 사례이다.[31] 뒤이어 1927년 예과 4회 문과 B조에 입학한 이흥배도 이듬해 다시 입학시험을 치루고 문과 A조로 입학하였다.[32]

예과 전공과 학부 전공을 일치시키는 규정은, 예과에서의 성적에 따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작동하였던 같다. 예과 1회 입학생이 학부에 진학하는 1926년에는 기본 원칙이 그대로 지켜졌으나, 예과 2회생이 진학하는 1927년에는 문과 B조를 수료한 주평노, 변정규, 최용달이 법학과로 진학하였음이 확인된다. 변정규를 비롯한 경성제국대 학생들의 구술채록을 진행한 이충우에 따르면, 문과B조 출신의 법학과 진학은 예과 재학 당시의 성적이 월등하였기 때문이었다.[33] 이러한 서술로 짐작건대, 문과B조의 많은 조선인 학생들은 예과 진학 이후에도 학부 진학 시 법학과로의 이동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성제대 학생에 대해서는 총독부 학무과장이 나서서 졸업 후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경성제국대학교 첫 졸업생 배출에 대한 1928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본인 20명, 조선인 20명 총 40명의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이 학생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쉽사리 취직을 하게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이들의 졸업이 1929년 봄인데도 불구하고, 1928년 9월부터 이미 경성제대 총장과

31) 이충우, 최종고, 앞의 책, 136쪽.
32) 이충우, 최종고, 앞의 책, 157쪽.
33) 이충우, 최종고, 앞의 책, 136쪽.

협의하여 각 도지사에게 1회 졸업생에 대한 취직 의뢰를 부탁하였다.[34] 이러한 기사를 볼 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총독부의 취업 알선의 도움을 받아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신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경성제대의 이점을 잘 알고 있던 당대 식민지 조선인 청년들은 법학과에, 그것이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학과에 입학하고자 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법대 열풍은 민족차별을 총독부 관료라는 직업을 통해 이겨내고자 했던 식민지 청년들의 지위 상승 노력을 잘 보여준다. 또한 경성제대 법학과가 속한 법문학부의 조선인 입학생이 경기, 충남, 경북, 평남, 함남 출신 순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조선시대 때부터 성리학에 기반하여 관료로 진출해왔던 경기·충청의 기호지방 출신과 경상도 출신들이 일제강점기에도 여전히 관료 진출과 연관된 문과에 주로 입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시대에는 문인 관료가 되기 어려웠던 평안도·함경도의 서북지방 출신들이 경성제대 법문학과에 다수 진학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한말의 신분제 잔재가 조선인 사회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학력주의와 연동된 화이트칼라 전문직업이 대두되면서 그와 같은 기회를 잡은 서북 출신들이 지역차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Ⅳ. 대졸자 취직난과 의대 지원자 증가

의학은 구한말 새롭게 부상한 대표적인 근대 학문이었다. 의사는 식민

34) 〈경대(京大) 첫 졸업생 명춘(明春)에 40명〉, 《조선일보》, 1928.09.30.

지 조선에 출현한 주요 근대 전문직 중 하나였다. 조선에서는 갑오개혁 이래 근대 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대한제국 정부가 1899년 의학교를 설립하여 서양의학 교육을 시작하였다.[35] 식민통치 정당화를 위해 위생 정책을 활용했던 조선총독부도 서양의학 교육을 중시했다.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 및 식민지 주민의 위생 및 의료 수요 증가가 근대 학술에 대한 조선인의 수요와 맞물려 1910년대부터 의학을 공부하려는 조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의학교육을 받으려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증가하고 있고, 식민지 조선에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칙에 규정된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36] 조선총독부는 이를 수용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정원을 늘렸고, 이후 1924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의사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명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직업이었다. 1920년대 초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나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80원에서 150원 정도를 받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37] 1930년대에는 월급의사의 경우 100원 정도, 개업의의 경우 300원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38] 당시 100원이 현재 화폐가치로 약 600만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의사의 급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39] 식민지민이라는 차별을 덜 받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기도 했다. 1925년에 예과 이과로 입학하여 의학부 2회 졸업생이 된 전 서울대 의대 교수 한기택은 경제적 안정보다는 인간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긍지가

35) 「勅令第七號 醫學校官制」, 『官報』, 1899.03.28.
36) 「京城醫學專門學校學則改定ニ關スル件」, 『中等學校學則變更』, 1918.
37)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1923. 09. 19,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8) 〈現代 쌀라리맨 收入調〉, 《三千里》 제8권 제1호, 1936.01.01, 22쪽.
39) 1931년 전 까지 조선은행권은 금본위제에 따라 1원이 순금 0.75g의 가치를 가졌다. 2023년 7월 기준 금1돈(3.75g)이 약 30만원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당시 1원이 현재 화폐가치로 6만원을 조금 넘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훨씬 컸다고 구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인은 조선인을 곧잘 멸시했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조선인이란 구별이 따로 없었다. 일본인들은 의사가 왕진을 가면 더운 물을 준비해놓고 손을 씻을 때까지 반드시 수건을 들고 서 있었다."[40] 즉, 의사라는 직업은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원천이었다. 의사라는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많은 학생이 경성제국대학교 의학부에 진학하려 했다.

1926년 예과 입학생 모집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의학부 지망자가 현저하게 증가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문과 80명 이과 80명 총합 160명 모집에 문과 398명 이과 489명이 지원한 것이다. 이때 경성제대 이과는 의학부 단일 학부였으므로, 모든 이과 지원생은 의학부 지망생이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인의 의학부 지망자가 비상히 증가"했는데, 이는 조선인 사이에서 불기 시작한 의대 진학 열풍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41] 1928년 고등전문학교의 입학경쟁률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볼 때, 의학에 대한 선호 현상은 경성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42]

이와 같은 의학 선호 현상은 취업난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 학교 등 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43] 식민지 조선

40) 이충우, 최종고, 앞의 책, 82쪽.

41) 경성제대는 민족별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과(의학부) 지원생 489명 중 조선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의학부의 지원자증가〉, 《조선일보》, 1926.02.18; 〈경성대학예과 의학지망다수〉, 《조선일보》, 1926.02.18.

42) 〈뚜드려도 안열리는 입학난의 지옥문 학교는 적고 지망자는 년년히 늘어〉, 《동아일보》, 1928.03.12.

43) 〈전문학교졸업생 취직상황〉, 《동아일보》 1924.03.10.

에서는 아직 대졸자들을 수용할 만한 직업군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소수의 화이트칼라 직군은 민족차별로 인해 일본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인 청년들은 심각한 취직난을 마주하게 되었다. 경성제대 1회 졸업생이 배출되기 반년 전인 1928년 9월에 보도된 취직난 기사에 따르면, 관립·사립전문학교 조선인 졸업생들은 "취직난에 절규"하고 있었다. 그해 졸업생 251명 중 248명이 취업에 성공한 일본인 학생들과 달리, 조선인 학생들은 234명 중에서 불과 148명, 즉 63%만이 취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법과나 문과를 졸업한 학생보다는 고등농업학교, 고등상업학교와 같은 실업 성격의 전공을 가진 학생과 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이 취업에 더욱 유리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법과 문과 졸업생이 잘 취직하지 못한 반면, 실업학교 졸업생은 대부분이 취직했다고 밝힌다.[44]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대입 준비생들은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 학력인 경성제대에서도 의학부에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다.[45]

식민지 조선의 의대 열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경성제대 의학부 지망생은 1928년 598명(67%), 1929년 721명(58%), 1930년 685명(62%), 1931년 570명(61%), 1932년 680명(60%)을 기록하여 꾸준히 문과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46] 1932년 경성제대 의학부 지망생 증가 현상을 보도

44) 〈관사립전문출신의 취직 조선인 육할 일인 십할〉, 《조선일보》, 1928.09.30.

45) 대입 준비생들이 취업난 속에서 실업학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최상위 고등교육을 이수하고자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업학교가 취업에 유리하다고는 해도 그보다는 대학에서 취업이 유리한 학과 또는 전문학교 진학을 목표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46) 괄호 안의 숫자는 경성제대 예과 문이과 전체 지원자 수 대비 이과(의학부) 지원자 비율이다. 1924년부터 1942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성제대 예과 모집에서 단 3회(1925년, 1935년, 1936년)를 제외하고 모두 문과 지원자보다 이과 지원자가 많았다.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

한 기자들은 "일반학도층의 경향이 문학에서 이학으로!" 전환되어 간다고 평했으며, "심각한 취직전이 젊은이들을 자극하여 조금이라도 수요가 많은 방면에 행하려고 하는 경향인 듯하다"고 분석하였다.[47] 이러한 사실은 의학 선호 현상이 의사라는 명망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1930년대 중반까지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인구 대비 의사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1936년을 기준으로 조선인 의사 1,093명, 일본인 의사 1,270명, 외국인 의사 28명 합계 2,391명이었다. 당시 조선 내 인구가 2천3백만이었는데, 이는 인구 9,619명 당 의사 1인이 되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관립전문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교는 의학전문학교였다. 경성제대의 의학부에 더해, 경성의전과 평양의전, 대구의전이 있었으며 사립학교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까지 합하면 의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5개였다.[48] 이는 조선총독부가 의학전공이 식민지배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동시에, 위생 정책 수행을 비롯하여 지배정책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식민지배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정치학을 학과로 형성하지 못하게 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1930-40년대에도 식민지 조선의 의대 열풍은 지속되었다. 의사의 수요는 늘어갔고, 취직을 위한 의대 지원자도 꾸준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경성제대 의학부 진학 열기는 학력 위계구조와 연관되어 있었다. 경성제대는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 체제 최상층에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경성제대 의학부에 의학교육 자원을 집중시켰고, 이는 의학전문학교 학생들에 비해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에게 더 많

교출판문화원, 2011, 510쪽.

47) 〈성대지망생 대부분이 이과〉, 《조선일보》, 1932.02.05; 〈경대예과지원자 모집정원의 6배〉, 《동아일보》, 1932.02.14.

48) 〈삼관립의전 의사부족의 조선에 의전에 입학극난〉, 《동아일보》, 1936.02.13.

은 연구 및 임상실습 기회와 취직 기회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임상 실습 기관으로 이용하였던 총독부 병원이 192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설립에 따라 경성제대 부속병원으로 변경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총독부 병원의 의사들은 상당수가 경성의전 교수를 겸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총독부 병원이 경성제대 부속 기관이 되면서 우수한 교수들까지 경성제대 의학부로 옮겨가게 되었다.[49] 조선총독부는 경성의전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1928년 경성의전 부속병원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1933년 시점에서 경성의전 부속병원의 부지가 9,000평, 건평 2,800평 규모였는데 비해,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병원의 건평이 22,300평에 달해 약 10배 이상의 규모 차이가 났다.[50] 이러한 사실은 경성제대 의학부로의 의학 교육 자원 집중화와 학교 간 위계 구조를 잘 보여준다.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생들은 부속병원에서 교수를 돕는 부수(副手)와 조수(助手)로 일하며 연구 및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51] 1930년 배출된 경성제대 의학부 제1회 졸업생 55명 중 조선인은 12명이었는데, 55명 중 취직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9명이 모두 의학부 조수로 학교에 남아 연구를 이어갔다. 그중 조선인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소 6명 이상이 조수로 남았음을 알 수 있다.[52] 이는 이후 경성제대 부속병원

49) 〈부속병원설치〉, 《동아일보》, 1926.06.01.

50) 「주제별 해제 :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고적·관사·사법·행형 등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국가기록원; 「주제별 해제 :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고적·관사·사법·행형 등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국가기록원(검색일 : 2023.07.01. – https://theme.archives.go.kr/next/place/medical.do?-flag=1).

51) 부수(副手)는 구 제국대학에서 조수(助手) 밑에 있으면서 연구실 일이나 연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2) 〈형설공의 성과 각 학교 졸업식〉, 《동아일보》, 1930.03.25.

과 도립병원 의사 또는 의학전문학교 강사 등으로 취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점은 특히 대공황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식민지 조선의 의사 수는 일제강점기 내내 인구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의학사(醫學士) 취득자의 취직은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1929년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1931년 초부터 1933년 초까지 의사도 취직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경성제대 학생들처럼 부속병원에 남을 수 없었던 의학전문학교 졸업생과 개업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1931년 봄에 "해마나 늘어가는 의사"와, "미증유의 대공황의 영향으로 민중생활 수준"이 극도로 저하된 문제가 겹쳐서 개인 병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경영 곤란에 빠졌다. 개인 병원들은 환자를 흡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였다. 개인병원은 공설병원에 비해서는 진료 및 약값을 더 저렴하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환자들이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인해 공설병원을 이용하면서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병원을 폐업하는 경우까지 속출했다. 의사는 개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1931년 3월에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는 일본인·조선인 의사 74명을 포함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대구 및 평양의 의학전문학교 졸업생들을 모두 합쳐 총 300명의 의사가 배출되었다. 취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많은 학생이 의학을 선택한 결과가 대공황을 맞으면서, 과잉 배출된 의사들의 취업난 문제가 대두되었다.[53]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나선 경우도 있었다. 1933년 12월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사토 고조(佐藤剛藏)는 조선총독부 행형(行刑) 과장에게 졸업예정자 명단을 보내 보건기수(保健技手) 채용을 부탁하였다.[54] 보건기수는 조선총독부 감옥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주임관

53) 〈금춘 의과 출신 300명 반수 이상 진로 막연〉, 《조선일보》, 1931.03.06.

인 보건기사 아래에서 일하는 조수였다.[55] 졸업생들이 관립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의가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총독부 하급 관료 자리를 주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달리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생들은 부속병원의 부수(副手)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취업난과 관련한 어려움을 덜 겪었다. 대학 의학부 부수와 조수가 되어 실력을 더 기르고, 이후 조교수나 다른 의학전문학교 강사 또는 병원 취직을 노린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1930년대 경성제대 의학부의 대학원생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당시 민족차별이 극심하여 의학부와 법문학부를 통틀어서 조선인 조교수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조수 선발에서도 전체 정원의 3분의 1만 조선인에게 허용되기 때문에 1931년 이후 졸업생의 경우 조수가 되기도 어려웠다. 경성제대 의학부 조수 출신으로 도립의원 같은 관공립 병원의 의원으로 취직하는 길은 일본인에게 우선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졸업생의 취직에 제약이 따랐다.[56] 더욱이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조선인 학생들이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부수나 조수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성제대 졸업생들은 부수·조수·조교수 선발과 강사 및 교수 선발에서 일본인 및 본토 제국대학 출신 조선인 모두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30년 경성제대 의학부 제1회 졸업생으로, 부속병원 조수로 있던 김성진(金晟鎭)은 「장폐색시 소화액 분비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는 박사논문이 통과되어 1935년 의학박사가 되었다. 이는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생

54) 佐藤剛藏,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추천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 『형무소 인사관계 서류』, 1933.12.15.,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관리번호 : CJA0004085)

55) 「조선총독부칙령 제201호 조선총독부감옥관제」, 1923.05.04.

56) 〈금춘성대졸업생 취직은 불과삼분일〉, 《동아일보》, 1931.03.29.

중 세 번째 의학박사로, 조선인 졸업생 중에서는 최초의 의학박사 배출이었다.[57] 그간 미국이나 일본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조선인 의사는 있었으나, 식민지 조선 내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김성진 역시 민족차별과 본토 제국대학과 경성제대 간의 학력 위계로 인해 관공립학교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해인 1936년 11월 중구 서린동 133번지에 김성진외과병원을 개원하여 개업의로 활동하였다.[58]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의학부 부수와 조수로 근무한 윤일선(尹日善)이 1928년 동대학 조교수가 된 것과 대조를 보이는 것이었다.[59] 1931년 경성제국대학 의과 강사로 임명된 이갑수 역시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한 이후 교토제대와 경성제대에서 부수 및 조수 경력을 쌓은 인물이었다.[60]

식민지 조선의 의대 진학 열풍은 식민지의 민족차별과 지역 차별, 새롭게 대두된 학력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회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은 민족차별을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의사라는 전문직업을 보장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서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공했다. 그에 더해 경성제대 의학부 졸업은 구한말부터 지속된 지역차별을 넘어서는 데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에서 1940년까지 경성제대 예과 의학부로 입학한 조선인 학생들의 본적을 살펴본 결과, 경기지역(101명)에 이어 평안북도(48명)와 함경남도(47명), 평안남도(56명) 순으로 입학생이 많았다.[61]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된 서북지역 출신들은 전문직업을 가짐으로써 식민지 조

57) 〈의학박사된 김성진씨 경성제대출신으로 최초〉, 《동아일보》, 1935.10.26.
58) 〈인사·집회〉, 《조선일보》, 1936.11.15.
59) 〈성대조교수윤일선씨 의학박사학위에〉, 《조선일보》, 1929.01.10.
60) 〈성대강사에 이갑수 박사〉, 《동아일보》, 1931.09.11.
61)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537쪽.

선에서 여타 직업인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이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된 기호인의 서북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평안남도 출신으로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경성제대 의학부 강사,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한심석(韓沁錫)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1938년 경성제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1943년 「경성에 유행하는 디프테리아 균형」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경성제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62] 이후 경성제대 의학부 강사로 재직한 그는 196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을 역임하고, 1965년 대한병원협회 회장 및 대한내과학회 회장, 1970년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다.[63] 한심석은 평안도 출신으로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해 의사가 됨으로써 경성에 정착해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인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참전한 까닭에 이전과 비교하여 경성제대 의학부의 조선인 강사 임용이 쉬웠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인 채용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학계 업적을 기반으로 임용된 그는 민족차별과 서북인에 대한 지역 차별 모두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식민지 최고 대학의 의학부라는 학력과 그를 바탕으로 성취한 전문직업이 개인의 지위상승을 이뤄내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의대 진학 열풍이 조선총독부의 식민 지배를 위한 차별적 고등교육 정책에 포섭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성제대 의학부는 조선에 거주하는 총독부 관리를 비롯하여 재조선 일본인들의 진료를 뒷받침하였으며, 총독

62) 「경성제국대학일람」, 1940, 340쪽.
63) 김신근, 「한심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 2023.07.31.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799)

부의 시혜 선전과 범죄 수사, 위생 정책에 활용되기도 했다.[64]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학내 연구실 또는 부속병원에 근무한 조선인 의사들은 그들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식민지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학력에 기반한 지위 상승 노력이 법대·의대 진학 열풍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선인 학생들은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에 더해, 의사와 법조인, 총독부 관료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자 했다. 그래서 졸업이 그와 같은 직업과 연동되는 의대와 법대에 진학하고자 했다. 이는 일제하 민족차별과 신분제적 잔재에서 기인한 지역차별을 이겨내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한 시도였다.

조선인 학생들의 경성제국대학 법대와 의대 진학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차별적 식민지 고등교육 정책과 식민지 관료제의 연동, 그리고 대졸자 취직난에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설립을 억제하고, 식민통치에 유용하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 학문만을 교육하게 했다. 그와 동시에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그 내외부에 비공식적인 학문 및 학과 간 위계질서를 생산했다. 경성제국대학에는 식민지 관료 생산에 필요한 법학과와 위생 및 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

64) 〈범인유혈검사〉, 《동아일보》, 1927.09.11; 〈제삼정수질시험결과〉, 《동아일보》, 1928.03.01.

학과가 중시되었다. 정치학·경제학·공학은 개별 학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조선인의 근대 학술 교육 및 연구에 제한을 가한 정책이었다.

법학과 수업과정은 총독부 관료 임용시험은 고등문관시험 과목과 연동되었다. 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 및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식민지 조선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 또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많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제가 관료 진출 및 취업 자격과 연동되어 있는 경성제국대학의 법학과와 의학과에 대한 진학열이 달아올랐다.

경성제대 법과 졸업생들 상당수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총독부 관료로 임용되었다. 의학부 졸업생들 다수는 경성제대부속 병원에서 일하거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강사 또는 교수가 되었으며, 개업의가 되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전문직 직업을 가지게 된 이들은 일본인에 대해서도 민족차별을 비교적 덜 당하는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 중 다수가 기호인들에게 차별받던 서북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력과 전문직 직업을 가짐으로써 민족차별에 더해 지역차별 또한 이겨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법대·의대 열풍은 결과적으로 식민지에 존재하는 차별들을 타파하기보다, 식민당국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지위 상승 노력이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2023.07.09. 투고 / 2023.08.08. 심사완료 / 2023.08.12. 게재확정)

[Abstract]

A craze over entering law and medical schools in colonial Joseon

Kim, Seulgi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efforts to improve social status based on an academic background in colonial Joseon appeared in the form of a craze over entering law or medical schools. Joseon students wanted to have professional jobs such as doctors, legal professionals, and officials a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addition to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college graduation. This was an attempt to improve socioeconomic status by overcoming ethnic discrimin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s well as regional discrimination due to the remnants of the status system.

Since only the studies useful for the colonial rule were permitted, Keijō Imperial University attached importance to departments such as laws necessary for training colonial officials and medicine necessary for implementing hygiene and medical policies. The law school curriculum was linked to the courses for the Higher Civil-servant Examination, and the medical school provided an opportunity to obtain a medical doctor's license and gain clinical experience at Keijō Imperial University Hospital.

There were serious job shortages in colonial Joseon where the industries were not developed. Nonetheless, many law school graduates

of Keijō Imperial University were appointed as officials a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edical school graduates got jobs at Keijō Imperial University Hospital or became lecturers or professors at Keijo Medical College, and even became private practice physicians. Those with professional jobs in colonial Joseon succeeded in obtaining a stable socioeconomic status that would put them under less ethnic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at many of them were from the northwest suffering discrimination, they could overcome not only ethnic but also regional discrimination by securing an academic background and a professional job. However, the craze over law and medical schools in colonial Joseon has limitations as it was merely an effort made by individuals to move up the ranks as pieces on a chessboard created by the colonial authorities, rather than actually abolishing the discriminations existing in the colony.

□ Keyword

Credentialism, Keijō(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Medical school, law school, Japanese Colonial higher education, Colonial modernity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역 윤치호 일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태웅·장세윤,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2022.
이충우, 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정근식 외,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정병욱, 『낯선 삼일운동 — 많은 인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비평사, 2022.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정연태,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푸른역사, 2021.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대한민국 엘리트의 기원, 그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나?』, 휴머니스트, 2019.
정종현, 『특별한 형제들 -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을 넘나드는 근현대 형제 열전』, 휴머니스트, 2022.
황경문 저, 백광열 역, 『출생을 넘어서-한국 사회 특권층의 뿌리를 찾아서』, 너머북스, 2022.

김상태,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김자중, 「일제 식민지기 조선의 고등교육체제의 성격」, 『한국교육사학』 38(3), 2016.
장세윤,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졸업생과 고등문관 시험」, 『서울과 역사』 69, 2007.

정선이, 「일제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77, 2008.
조형근, 「식민지근대에서 좋은 의사로 살기-좁고 위태로운, 불가능한 행복」, 『역사비평』 108, 2014.
차남희, 이진,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시기 중인층의 상승 이동」, 『담론 201』 40, 2010.